

권력 경색, 거품 붕괴, 역사 낙태, 제국 변모 지금 좌표는 있는가

이병천·홍윤기 _ 공동편집인

올해 무자년(戊子年) 들어 나라 대들보에 네 번 정도 큰 충격이 왔다. 완전히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서 아직 멀쩡하게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안팎에서 보면 나라 식구들이 살림살이하며 드나드는 모습이 위태로울 정도로 들보가 심상찮게 삐걱거린다. 문제는 바깥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세긴 했지만 새로 간 대들보의 재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없이 부실했다는 데 있다.

1. 권력 경색: 배제의 정치

사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촛불 시민항쟁은 정권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정책 사안에 대한 특출한 의견 표명 정도로 수용되어 더 발전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처리되었어야 했다. 비록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새 정권에 대해 시민 탄핵을 비롯한 퇴진 요구가 결코 약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조금 뒤집어보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 백일도 안 된 대통

령이 물러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처지였다. 물론 당장 물러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씨는 2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바로 지난해 말에 압도적 다수로 선출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다. 내각제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는 듯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손에 손잡고 촛불을 든 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아직은 대통령이나 정권의 퇴진이 아니라 제대로 교정된 정책이었다(시민운동 현장 참조). 하지만 두 번이나 큰 사과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항쟁이 잦아들었을 때 이 정권이 들고 나온 것은 결코 사죄나 반성 또는 화해가 아니라 추적과 체포, 그리고 구속이었다(특집 참조). 우리나라의 시민 대다수가 촛불 항쟁으로 인해 결코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믿는 터에 시민에게 이로운 일이면 정권과 대통령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꿈꾸었다. 항쟁 기간 동안에는 격앙된 시민의 감정이 두려워 어려웠겠지만 항쟁이 잦아든 뒤에는 광우병 대책위 사람들을 추적해 차가운 철창에 집어넣기보다는, 청계광장과 시청 앞 가두에서 유모차까지 끌고 왔던 젊은 엄마들, 정부를 비판했던 아고라 논객들과 '아프리카'의 인터넷 저널리스트들, 우리나라를 소통과 광장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나선 각계각층 촛불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 뜰에 불러들여 그동안의 서운함이 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배포가 큰 민주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정치였다면 연말이 다가오는 무자년(戊子年)이 이렇게 썰렁하고 공포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울러야 할 '정치'의 대들보가 제자리를 잃을 정도로 흔들려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정치의 덕을 좀 볼 것이라는, 그리고 시민과 국가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접어야 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쳐졌다. MB 정부의 '신공안 통치'로 대한민국의 시계바늘은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로 거꾸로 되돌아갔다.

2. 거품 붕괴, 신뢰 붕괴: 시장 만능 경제의 종말

1960년대 이래 한국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경제는 세상이고, 하늘이고, 우주였다. 경제가 잘못 되면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가라앉고, 우주는 종말이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은 '돈 버는 것'과 하나였다. 돈을 벌면 경제를 잘 하는 것이고, 돈을 못 벌면 경제를 잘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 버는 것이야말로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그러나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나 법적 규정보다도 더 엄정한 한국 사람들의 요구였다. 따라서 돈만 벌게 해준다면 그 어떤 문제 있는 정치나 파렴치한 범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잘 벌었던 것 하나만 믿고, 나를 위해서도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대단히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임기가 4년 이상이나 남아서 아직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웠어도 그가 퇴임할 때면 취임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출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견딜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경제가, 즉 돈 버는 일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 속도로 경제가 악화되면 상당수의 한국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혹시 몇 년 뒤면 좋아진다는 경제를 맞볼 수 있다면, 사는 것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 그때까지 남아서 자기들끼리 주위를 돌아보며,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는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지경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단지 돈을 벌기 어려워졌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미국 경제의 거품 붕괴와 글로벌 규모의 경제 위기는 돈을 놓고 돈을 먹는 일, 시장 만능주의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투기행위 자체가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사람들은 어디다가 돈을 잘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실 자유시장경제를 기어코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려고

했을 때 더 겁나는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마저 쓸 수 없다’는 것일지 모른다. 돈에 의존해서 모든 생존이 이루어지는 이 글로벌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돈 가진 사람들마저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생산자와 시장에서 인간의 소비를 기다리는 모든 재화가 수요자에게 제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금융이 식물 생산을 지원하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의 혈맥이 꼭 막혔다는 이야기다. 이제 단지 돈을 더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살아남는 것이 다급하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거품 붕괴와 신용 경색, 소비 침체의 시대가 찾아왔다. 미국에서 대출금(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는데, 왜 세계가 휘청거리는지 사람들은 묻고 있다. 사상누각처럼 누적된 거품 위에 올라서 있던 ‘위험 경제’에서 거품 붕괴와 신뢰 붕괴, 이 쌍둥이 붕괴가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에 태풍이 부는 식으로 ‘글로벌 위기의 나비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대전환점에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으며, 경제에 관해 철학적,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진 자로 하여금 돈을 더 벌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사람은 빈곤해질 것이다. 별 돈을 가진 사람, 돈 놓고 돈 먹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들의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 모두에게 장기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고, 주택, 의료, 교육, 기타 기본 공공재를 조건 없이 공급해주는 것으로 경제의 판을 새로 짤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강자와 부자들, 즉 강부자들의 탐욕 그리고 ‘의식이 존재를 배반한 채’ 가망 없는 대박을 바라는 약자들의 ‘허위의식’을 상대로 만만찮은 신경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쫓아다니는 돈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빵을 만들고 빵을 나누고 빵을 교환하고 빵을 먹는 데 근본 바탕이 되는 그 어떤 신뢰임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신뢰 없이는 앞으로 어떤 경제체제를 꾸리더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 신뢰의

초석을 놓을 것인가?

3. 역사 낙태: 민주 포기, 평화 포기, 민족 포기

그러나 현재만 우리를 즐라매고, 조이고 드는 것이 아니다. 몰지각하게 과거가 잘려나간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분단 반쪽이 도외시당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공간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일어났다. 무자년 '건국' 담론은 대한민국의 존립 범위 자체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킨다(주제기획 참조).

우리는 대한민국을 긍정한다.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순진무구한 순결한 태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오와 오점과 모자람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1948년 8.15를 긍정하면서도 뉴라이트처럼 오만하지 않고 그 8.15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그늘, 이후의 뒤틀린 역사를 함께 볼 줄 아는 자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그 뒤틀림을 바로 잡기 위한 민주, 민족, 평화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중과 시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 우리는 식민지였으나 그로부터 해방되어 독립 국가를 만들었으며, 문맹에서 탈출했고, 빈곤을 극복했으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고,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았다. 그런데 그것은 1948년 8.15에 비로소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멸망 뒤 국가와 민족의 위운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왕실이나 양반이 아니라 예전에는 피동적으로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 땅의 민중이 깊어지게 되었다. 기미년의 운동은 명백히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 때 독립이란 명백히 국가로서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었고, 선언은 건국에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건국 기념일이란 것을 꼭 만들어야 한

다면 ‘국가를 독립시켜 세우기로 다같이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례이다. 미국 역시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보다 13년 지난 1789년에 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그들에 있어 건국 원년은 1789년이 아니라 1776년이다(한시준 선생 글 참조). 이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미군의 룝색(rucksack)에 실려 온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멸망 10년 뒤 자발적으로 일어난 ‘아(我) 민족’의 의지와 운동에 기원을 가지면서 면면히 체화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무자년 ‘건국’ 담론의 또 다른 큰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에서 북한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로서는 그 독립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국가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무관한 별도 국가는 아니다. 정부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회 안에 북한에서 올 대표를 기다려 100석을 남겨두고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2000년 6.15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무자년 ‘건국’ 담론은 북한에 대해 단지 현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대립각을 세운다. 더 이상 북한이 우리와 동족이고, 평화와 교류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타도하고 복수해야 할 최고 적대국으로 북한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양측 정권을 다시 마주 앉게 할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야말로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의 항복 수준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 먼저 굽히라고 하기도 겸연쩍은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경색 국면이 지속되다가 결정적인 실책이 범해지고 나면 남북한 양쪽의 동포들은 불행히도 원치 않는 대결 또는 전란 상태로 끌려 들어갈지 모른다. 남북 화해가 아니라 그 대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의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나머지 남북 시민들이 이 대결 국면에 동원되고 원치 않는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금강산 총격은 이같은 대결의 희생이 무고

한 시민에게 떨어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평화 안보'가 아니라 대결 속의 안보 또는 안보를 저당잡힌 불안한 대결 국면, 그리고 파국이 우려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4. 제국의 변모: 제국의 '배신'과 동맹 방황

한미 관계는 영원히 불운하다. 우선 서로를 보는 초점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을 혈맹이나 한미 동맹의 최우선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한 매개항으로 본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국을 한국 없으면 못 사는 혈맹으로 위치시키려고 한다. 미국에 대한 한국 보수세력의 일방적 짝사랑은 미국이 예컨대 1972년 핑퐁 외교 때부터 한국에 배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한국 전쟁에서 피의 대결을 벌였던 당시 중공과 미국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허망하게 그리고 쉽게 국교를 뺐던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신행위는 그 끝을 모른다. 새로 등장한 한국 정부와 그렇게 척척 죽을 맞출 줄 알았던 부시 행정부는 어찌면 그렇게 예의도 갖추지 않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시키는 절차를 밟아버렸는가?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신 시즌 3은 이제 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의 매개 없는 북미 직접 통교가 북한의 판단 착오가 없는 한 거의 현실화될 조짐이다. 오바마의 미국이 한국과 사사건건 연대해서 북한 문제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핵문제라고 하는 자기를 고유의 의제가 있고,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따라올 것으로 여길 것이다. 어차피 중국과도 수교하지 않았던가?

사실 미국 쪽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일이 없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단지 방향할 따름이다. 그것도 주로 한국 쪽의 사정에 따라 그렇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수로 보면 거의 세계 톱이고, 미국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왜 미국을 잘

모를까,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외눈박이에서 벗어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바로 알기 못지 않게 정말 모든 면에서 제대로 미국 바로 알기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변모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내우외환의 위기 시대는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아도 별수 없이 해야 할 공부 길을 더 넓게 열어 주고 있다.

(1) 국가는 시민과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는 국가의 동반자인가 적대자인가? 새삼 국가-국민 관계라는 아주 초보적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정당 정치와 광장 참여정치의 위상과 상호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특집 참조).

(2) 경제: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돈을 꺼내들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 임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돈이 얼마나 있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생산력 그 자체'로 보자면, 이미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그런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식량은 풍년이라서 항상 문제였고, 물자는 소비되지 않고 남아돌았다. 이런대도 왜 민생은 고달픈 것일까? 누구인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라고 한 사람은? 물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문제다.

(3) 북한은 왜 우리의 적이어야만 하는가? 국가 아닌 민족의 일원으로서 북한은 우리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령에 쓸 데 없고 생태계만 파괴할 뿐인 운하를 뚫을 것이 아니라, 예컨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으로 일본의 도쿄-대한민국 서울-평양/원산-만주/시베리아-실크로드/우랄 산맥-베를린-파리-칼레-런던에 이르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TER, trans-eurasian railroad)를 놓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4)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미국이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미국이 이전의 제국(주의)에서 달리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유

익한 영향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글로벌 위기 시대의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좁아진, 그래서 숨쉬기도 꺾어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아야 할 것이다. 산성에 가로막힌 공화국과 시민, 돈이 돌아가지 않는 위험 경제, 시간적으로 축소된 역사, 통하지 않는 북한, 그리고 우리 의사와 항상 반하게 돌아가는 미국, 그럼 그 뒤는?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에 지금 좌표는 있는가?

2008년 12월

공동편집인 이병천·홍윤기